
2020 UNGC 이행실적보고서

[UN Global Compact Communication On Progress]

2020. 11.

순 서

I .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지 선언문	1
II . 기관 현황	2
III . 10대 원칙 이행 성과	5
1. 인권	5
2. 노동	8
3. 환경	12
4. 반부패	15

I . 유엔글로벌콤팩트 지지 선언문



한국교통안전공단은
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
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이
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!

-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1981년 설립된 대한민국 유일의 종합 교통안전전문기관입니다. 과학적인 맞춤형 교통사고 예방활동과 자동차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,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자율주행자동차, 드론 등 국민생활 전반에 혁신을 줄 미래의 교통안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
- 우리 공단은 2013년 11월 UN Global Compact 가입한 이후, 윤리 청렴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고 사회공헌활동을 강화하는 등 인권·노동·환경·반부패의 4개 분야 10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.
- 앞으로도 UNGC 10대 원칙을 적극 지지하고, 사회전반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2020년 11월 13일

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권 병 윤

Ⅱ. 기관 현황

1 설립목적 및 연혁

□ 설립근거

- 한국교통안전공단법(법률 제3185호, 1979.12.28. 제정)
-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10151호, 1981.1.5. 제정)

□ 설립목적

-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,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,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(공단법 제1조)

□ 주요연혁

- 교통안전진흥공단 창립(1981.7.1.)
-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(현 자동차안전연구원) 설립(1987.5.15.)
- 교통안전공단으로 명칭 변경(1995.4.5.)
- 공단 본사 경기도 안산 이전(2002.6.3.)
- 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개소(2009.3.2.)
- 공단 본사 경북혁신도시(김천) 이전(2014.4.20.)
-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개소(2017.3.3.)
-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명칭 변경(2018.1.1.)

2 주요사업

□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관리 및 연구

- 운수회사 안전관리, 교통수단안전점검,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등 사업용 자동차 교통안전관리
- 교통안전 교육·홍보, 교통안전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
- 교통안전 정책 연구, 대중교통 및 도로교통시설 안전관리
-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사업

□ 철도·항공 교통안전관리

- 철도안전 관리체계(승인, 검사, 안전연구 등), 철도종사자 자격관리
- 드론 등 항공종사자 자격관리, 항공안전 교육 및 항공장애표시등 안전관리

□ 운행자동차 안전관리 등 안전검사

- 운행자동차 안전도 및 배출가스검사(정기, 종합), 튜닝승인
- CNG자동차 내압용기 재검사, 기계식주차장 검사, 삭도·케도 검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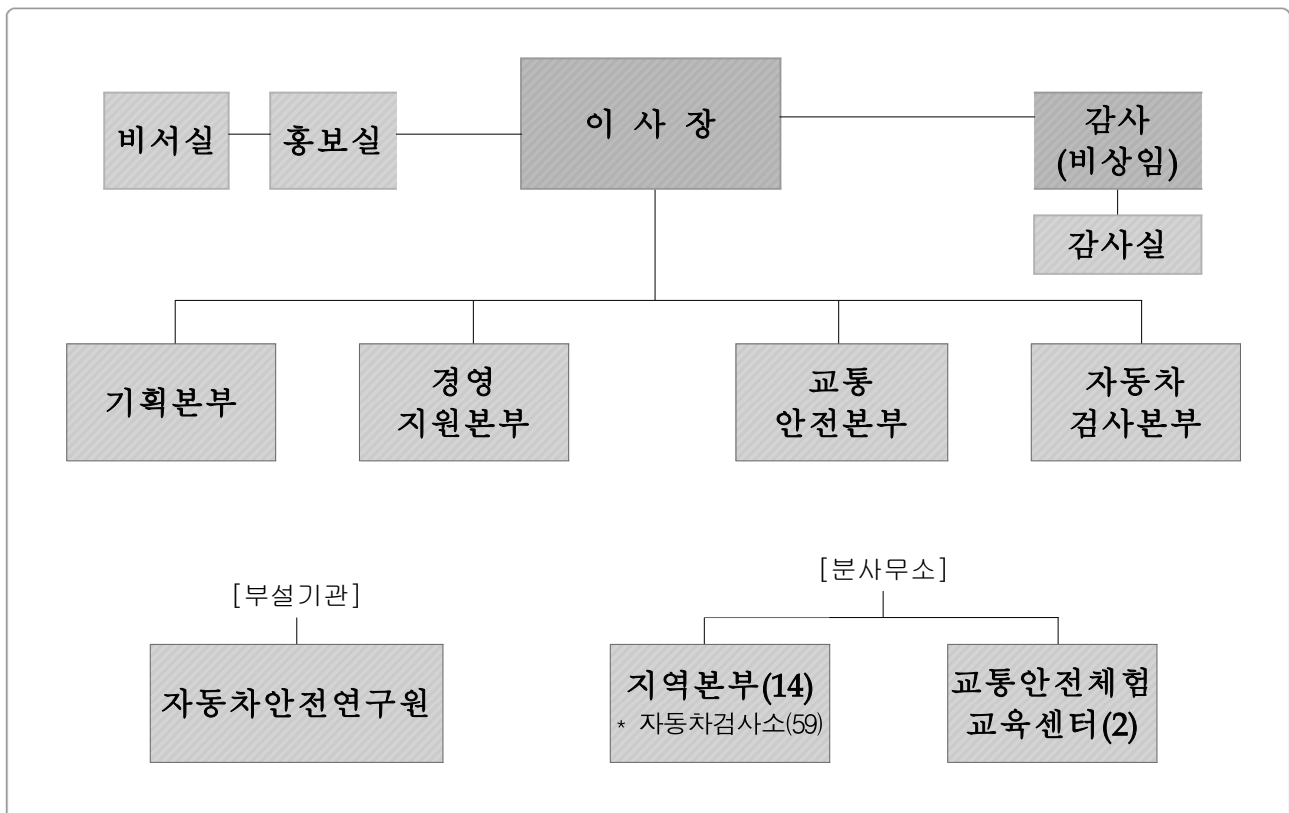
□ 자동차 안전도 향상을 위한 시험·연구

- 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 미래형 자동차 안전성 평가기술 연구
- 제작결함조사, 자동차 안전도평가,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화

3 조직 및 정원

□ 조직

- (본사) 4본부·3실
- (부설기관) 1원
- (분사무소) 14지역본부(59검사소)·2센터



□ 인원

(단위: 명 / '20.10월 기준)

구 분	계	임원	1급	2급	3급	4~7급	실무직
정 원	1,745	5	26	82	194	1,144	294

4 예산현황

□ 일반회계

(단위: 억 원)

수 입				지 출				
항 목			예 산	항 목			예 산	
자 체 수 입	사업수입	자 동 차 검 사	1,320	인 건 비(복리비 포함)			1,271	
		기 타 안 전 검 사	174	경 상 비			120	
		시험·교육·연구용역	602	사업비	안 전 검 사 사 업			706
		자동차 안전시험연구	231		교 통 안 전 사 업			1121
		계	2,327		자 동 차 안 전 연 구 사 업			667
	사업외	잡 수 입	26	예 비 비	소 계			2,494
		전 기 이 월 자 금	46		예 비 비			44
		계	72		차 입 원 리 금 등			15
	소 계		2,399	합 계			3,944	
	정 부 출 연 금 · 보 조 금			1,545	합 계			3,944
합 계			3,944	합 계			3,944	

※ 2019년 예산: 3,255억 원

□ 특별회계

(단위: 억 원)

세 입			세 출		
항 목		예 산	항 목		예 산
교 부 금		229	피 해 자 지 원 *		229
합 계		229	합 계		229

※ 2019년 예산: 253억 원

* 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」에 따른 ‘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’

Ⅲ. 10대 원칙 이행 성과

1 인 권

원칙 1.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.

◆ 공단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, 세계인권선언과 관련 정책을 지지합니다.

□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을 관련규정에 명시

구 분	주 요 내 용
윤리헌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.• 우리는 국내법과 국제규정을 준수한다.
윤리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공단은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여,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·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.
인권경영헌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·종교·장애·성별·출생지·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.
인권경영 이행지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, 노동자 기본권선언,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.
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지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이 지침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인권경영이행지침 제25조제4항에 따라 인권 침해 진정에 대한 접수, 조사 및 구제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단체협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헌법과 노동관계법 및 국제노동협약의 기본정신에 따라 민주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경영권과 노동권을 상호 존중하며 근로조건 개선과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한다.
인사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직원은 형의 선고,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강입 또는 면직당하지 아니한다.

◆ 공단은 장애인,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.

□ 사회형평적 채용 실시

- 장애인(각 전형별 5점 가점), 취업지원 대상자(각 전형별 5~10점 가점), 이전지역 인재(서류전형 5점 가점)에 대한 채용가점 부여

(단위: 명 / '20.10월 기준)

구 분	기준인원	의무고용비율	의무고용인원	실제고용인원 (달성률)
장애인	1,960	3.4%	66	67 (101.5%)
취업지원 대상자	1,774	4.0%	70	71 (101.4%)
이전지역 인재	97	24.0%	23	13 (54.2%)
시간선택제	132	3.0%	4	2.95 (73.8%)

* 11월 현재, 신규채용 진행 중으로 연말 기준 목표 달성 예상

□ 여성·장애인 및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 확대

- 사회적 약자 기업에 제안서 평가 등 가점 부여로 입찰 참여 증가

(단위: 백만원 / '20.10월 기준)

구 분	목표	실적	달성률	목표근거
여성기업생산품	3,405	5,523	162.2%	• 물품·용역 구매액의 5% + 공사구매액의 3%
중증장애인생산품	700	681	97.3%	• 물품·용역 구매액의 1%
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	480	506	105.4%	• 물품·용역 구매액의 0.6%
장애인기업생산품	700	726	103.7%	• 물품·용역 구매액의 1%
사회적기업생산품	1,800	1,911	106.2%	• 물품·용역 구매액의 3%
사회적협동조합생산품	70	75	107.1%	• 물품·용역 구매액의 0.1%

원칙 2. 기업은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.

◆ 공단은 구성원 및 고객, 협력업체 등 외부 이해관계자 인권 존중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□ 구성원 인권침해 예방 및 근무환경 개선

- '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지침' 제정으로 인권침해 구제절차 구체화
- '성희롱·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지침'을 개정하여 고충상담원 지정, 정식 조사 절차, 피해자 보호 등 근거 마련
- 하위직,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 운영을 통해 특별승진 도입, 근무성적평정 조정, 전보 마일리지 제도 등 인사제도 개선
- 상담직 등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심리케어상담서비스 확대
- 가족의 사고 등으로 인한 연간 90일의 가족돌봄휴직 신설

□ 외부 이해관계자 인권보호

-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확대(도로안전, 자동차안전 + 철도안전)
- 윤리·인권경영 추진의지, 신고채널 운영 등 CEO 메시지 대국민 공표
- 협력사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임직원행동강령 적용범위 확대
- 협력업체 계약 시, 안전관리 및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징구
- '고객현장 및 서비스 이행표준' 마련 등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
- 중소기업애로사항 건의 채널 및 갑질피해신고센터 개설·운영

원칙 3.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한다.

◆ 공단은 헌법, 노동관계법, ILO 기본정신에 따라 단결권, 단체교섭권, 단체행동권 등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보장을 명문화하여, 조합원의 경제적·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.

□ 노동조합 권리보장 명문화

구 분	주 요 내 용
헌법 제33조제1항	•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, 단체교섭권, 단체행동권을 가진다.
한국교통안전 노동조합 규약 제2조	• 본 조합은 자주적인 단결로써 조합원의 근로조건, 임금, 복지 등의 유지개선과 기타 경제, 사회, 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한국교통안전 노동조합 강령	•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건설하며,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권익신장과 기본권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.

◆ 공단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상생발전의 정신에 입각하여 31년간 무분규 사업장을 달성하였습니다.

□ 협력적 협의체계 운영을 통한 근로조건의 향상

- 검사소 조기출근 해소, 자녀돌봄휴가 및 육아휴직 복귀자 멘토링 프로그램 신설 등으로 7년 연속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
- 통상임금 소송결과 반영 등 7년만의 임금 및 단체협약 무교섭 타결
- 노사 합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을 통한 KOSHA-MS 인증

원칙 4.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한다.

◆ 공단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정 등에 따라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며, 노동의 대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□ 강제노동 금지 명문화

구 분	주 요 내 용
근로기준법 제7조	• 사용자는 폭행, 협박, 감금,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 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,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.
공단 취업규정 제6조	• 직원의 근무시간은 09:00~18:00까지로 하며, 토요일은 무급휴무로 한다. 다만, 직원의 유연근무제 참여 신청에 따른 허용 등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근무시간·일수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, 국외사무소 근무 직원의 근무시간은 해당국가의 예에 따른다.
공단 단체협약 제53조	• 통상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, 1일 8시간, 1주 40시간으로 함으로 원칙으로 한다.

□ 적절한 근로의 대가 지급 및 휴식 보장

-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, 초과근무 후 휴식시간 및 보상휴가 부여
- 일 8시간 근로 및 1시간 휴식 시간 보장, 임신·육아 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유급 휴게시간 부여
- 임신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있는 여직원의 1일 근로시간 2시간 단축 허용
- 주 40시간 내에서 개인 여건에 맞는 유연근무제도 활용
-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병가 부여

원칙 5.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한다.

◆ 공단은 합리적 원칙과 기준에 따라 아동노동을 배제하고 있으며, 협력회사에 대해서도 공급자 행동강령 준수 등을 통해 아동노동이 철폐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.

□ 합리적 채용기준으로 아동노동 사전 예방

- 채용 지원자의 최소 자격기준 설정, 공직 적합성 확인을 위한 신원 조회 실시 등을 통해 비자발적 아동노동 발생 예방
-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임용 전 신분증빙서류 등을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아동 채용 방지

□ 협력회사에 대한 이행 서약서 및 행동강령

- 협력회사와 계약 체결 시, 안전관리·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및 공급자 행동강령 징구를 통해 아동노동 금지 준수

구 분	주 요 내 용
TS 안전관리·인권경영 이행 서약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,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·종교·장애·성별·출생지·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TS 공급자 행동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,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. ●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 됩니다. ●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.

원칙 6.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.

◆ 공단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기준 적용으로 부당한 차별을 사전에 예방하여 모든 임직원과 구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.

□ 고용 및 업무 차별 금지 규정

구 분	주 요 내 용
윤리강령 제8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교육,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,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, 성별·학력·연령·종교·출신지역·신체장애 등 기타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.
공단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15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단은 고용에 있어 성별, 연령, 인종, 장애, 종교, 정치적 성향 및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.
공단 인사규정 제7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관리세칙으로 정한다.
공단 인사관리세칙 제50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이사장은 시험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채용 과정에 감사부서의 장이나 직원 또는 감사부서의 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입회담당자를 참여시켜야 한다.

□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프로세스 구축·운영

- 외부위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에서 채용계획 확정, 합격자 발표 전 결격사유 최종 검증을 위한 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 제도 개선
- 채용비리 징계자 6개월 승진 제한, 인사업무 배제 등 제재 강화

□ 임원 임명 양성평등 실현

- 비상임이사 여성비율 확대 및 임추위 위원 여성 20% 의무 선임

원칙 7.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한다.

◆ 공단은 환경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를 통해 환경문제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□ 국민참여형 환경보호 실천운동 추진

- 사업용 운전자 대상 경제운전 체험교육 실시, 에코 드라이브 교육 평가시스템 인증기관(공군본부, 부산버스조합) 및 가상체험관 운영
- 화물자동차 연비왕 선발 대회(19개 기관 참여)를 통해 에너지 절감, 온실가스 감축 정책 홍보 및 대국민 경제운전 실천의식 제고
- 정기권 할인(10%) 및 보행·자전거 이용 마일리지 할인(최대 20%) 등 승용차가 아닌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알뜰교통카드 전국 도입
- 환경친화적 자동차(하이브리드, 전기차) 구매율 정부권장 목표 70% 달성 및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
- 종이컵 및 플라스틱 용품 사용 자제 캠페인, 우산비닐 대체 빗물 제거기 구입 등 1회용품 프리 챌린지 시행
- 우선구매 가능한 유형 선정, 집중관리로 환경표지(마크)를 받은 인증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녹색제품 구매목표(총 구매액의 80%) 달성
- 검사소 LED 조명 교체(200여개), 승강기 격층 운행, 냉난방 온도 관리 등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신규 건축물 태양광 설비 설치

원칙 8.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한다.

◆ 공단은 중대한 환경영향 요소인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통해 환경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

□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

○ 배출가스 과다 차량의 도로 운행 최소화(재검사기간 단축: 72→10일)를 통한 연간 CO 1,636톤, NOx 156톤, 매연 92톤 감축

○ 경유자동차 배출가스허용기준 강화 및 NOx 검사 도입

구 분	종전(개정 전)	개선(개정 후)
정기검사	매연 20% 이하	매연 10% 이하
종합검사	매연 15% 이하	매연 8% 이하

○ 배출가스검사 시행지역 확대 및 검사소 매연포집기 설치 의무화 등 배출가스 체계적 관리로 대기 질 유공 환경부장관 표창 수상

□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

○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 추진실적 동반평가, 기술 지원 등 상생협력 추진을 통한 목표관리 참여기업 확대('19년 35개사 추가, 누적 295개사)

○ 우수 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기준 완화, 신청기업 대상 설명회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중소 물류기업의 친환경 활동 참여 확대

○ 화주·물류기업의 에너지 사용량 최소화 및 온실가스 측정·관리를 위한 무시동히터·에어컨, 에어스포일러 등 보조금 지원(최대 50%)

원칙 9.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.

◆ 공단은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 및 확산과 친환경 운행행태 유도를 위해 기술 개발 및 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.

□ 친환경자동차 안전기준 등 평가제도 도입

- 하이브리드, 전기차 등에 대한 연료소비율, 실내공기질 부분 환경친화도 평가제도 로드맵 수립
- 화물자동차 전기·하이브리드화, 택배 트럭 하이브리드화 등 친환경차 연구를 통한 기술 확보로 온실가스 배출량 30% 절감 기대
- 지자체 대중교통시책평가 평가항목 변경 및 가중치 조정, 친환경 버스 도입률 도입(계량지표) 및 자발적 추진 유도
- 공항여객터미널 실내공기질 기준 평가제 도입, 공항 내 지상전원 공급장치 및 저공해 자동차 이용 활성화 유도

□ 친환경 운행행태 유도

- 화물차 운전자 대상 자동차 배기가스 주요원인 위험운전행동(급출발, 급정지, 급가속)을 줄이면, 보험료를 할인 해주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
- 자동차 배기가스 주요 원인인 위험운전행동(급출발, 급정지, 급가속) 감소에 따른 미세먼지 감소(215톤)에 기여
-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을 통해 정부 온실가스 체계적 관리 및 효율화

원칙 10.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.

◆ 공단은 4년 연속 청렴도 평가 우수, 10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으로서 반부패 청렴정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.

□ 사전예방감사 시행을 통한 부패 위험요인 제거

- 취약분야 및 주요 정책현안사항 기획점검, 구조적·관행적 공직비위 점검 및 민생 안전 관련 기강 확립
- 운수회사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단속을 위한 사업용 자동차 안전 관리실태 점검 범정부 반부패협의회 공공분야 안전감찰 시행
- 주요사업의 합목적성·합법성·합리성에 대한 일상감사의 복수 전담 제를 통해 처리기간 단축 및 감사의 의견 제시율 증가

□ 리스크 관리시스템 운영 강화

- 서면, 격월 점검 방식에서 전산화, 매월 점검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통합감사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리스크 관리
- 채용 과정(서류, 필기, 면접전형) 및 5억원 이상 제안서 평가 시 감사인, 시민참여혁신단 입회·참관으로 투명성 제고
- 익명성을 강화한 모바일 신고·상담채널, 블라인드 소통 게시판 신설
- 청렴기획단(단장: 이사장), 청렴실무전담반(실무자), 청렴옴부즈만(외부) 운영을 통해 청렴 BPR 과제 발굴 및 청렴시책 실효성 자문·교육